

정후식칼럼



정후식  
논설실장·이사

신년이 시작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다 되어 간다. 한 해의 첫머리에 사람들은 저마다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데, 올해 역시 크게 다르진 않았을 것이다. 비록 코로나 19 사태로 평범한 일상마저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 답배는 끊고 책은 가까이, 소식(小食)하고 가까운 거리는 걷기, 하루 10분 외국어 공부하기 등등. 연초가 되면 단골로 소환되는 이들 계획은 소소한 희망과 기대를 안겨 주지만 지속적으로 실천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다. '지어먹은 마음이 사흘을 못 간다'는 속담이 있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다행인 것은 날도래면 설날이 다가온다는 사실이다. 음력 1월 1일, 두 번째(?) 새해가 시작되는 것이다. 양력과 음력의 차이로 발생하는 이 시간의 지체는 우리를 안도하게 한다. 양력 새해의 결심이 작심삼일에 그쳤더라도, '패자 부활전'처럼 한 번 더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지가 약해졌다면 이때를 맞아 또다시 마음을 다잡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뭔가 다시 시작한다면 마치 기대하지도 않았던 보너스를 받은 기분 아니겠는가.

국민 절반 “코로나 감염도 운이다”

새해를 설계하듯, 해마다 정월 초승이던 행해였던 세시풍속이 있다. 토정비결(土亭秘訣)이나 사주를 보며 한 해의 신수(身數)와 길흉화복을 점쳐 보는 일이 그것이다. 자신의 안위보다 늘 자식 걱정이 앞섰던 어머니도 내 어릴 적 정초가 되면 용하다는 마을 어르신을 찾아가시곤 했다. 엄동설한에도 언 발을 동동 구르며 차를 기다렸다가 마침내 괘(卦)를 받아 오셨다.

은펜칼럼



최영태  
전 전남대 인문대학장

초중고 학생들이 입시 지옥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대학 서열 구조를 타파하고 대학 평준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필자도 이런 주장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서 독일식의 대학 평준화를 시도하는 것은 어렵다. 그 이유는 첫째, 독일은 거의 모든 대학(약 95%)이 국립(주립)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사립대학의 비율이 약 75% 수준이며,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 둘째, 독일은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이 매우 잘 되어 있다. 인구 8000만 명이 전국도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인구의 50%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셋째, 독일은 대학 지원자가 고등학교 졸업자의 약 35% 내외로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학생에게 투자하는 교육비가 그만큼 많으며, 상향식 평준화가 가능하다. 반면 우리나라의 대학 수준과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천차만별이다.

사정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대학의 서열구조

‘세상만사 운수소관’ 이라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미신이라며 짐짓 외면하면서도 행여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달뜩 마음으로 기다리곤 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늘 ‘물가에 가지 마라’ ‘연행을 조심하라’ ‘역마살이 끼었다’ 등 금기와 경계의 문구가 대부분이었다.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새해 운세에 대한 관심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지금도 여전하다. 오히려 요즘은 인터넷 사이트, 사주 앱, 유튜브 타로 등을 통해 계임을 즐기듯 쉽고 편하게 운세를 볼 수 있다. 애써 점집을 찾지 않아도 될 만큼 접근성이 향상된 것이다. 특히 취업난으로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고 위안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이를 자주 이용한다고 한다.

이런 분위기 탓일까. 우리나라 국민 절반가량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해 ‘어느 정도 운이다’거나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돼 있다’는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염병을 대하는 태도마저도 운명론적·결정론적 사고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구 팀이 지난해 11월 전국 성인 남녀 1076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가 감염되느냐 마느냐는 어느 정도 운이다’는 답변이 46.1%에 달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돼 있다’는 의견도 46.8%나 됐다. 특히 젊은수록 코로나 감염을 운명론적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높았다. 본인의 감염이 운에 달렸다는 응답은 20대에서 56.6%에 달했고, 30대(51.2%)와 40대(51.0%)에서도 절반이 넘었다. 반면 자신이 감염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 명 중 한 명만 ‘높다’고 응답할 만큼 낙관적 편견이 넓게 퍼져 있었다.

하긴 그럴 만도 하다. 지난 1년간 우리는 수차례 코로나 대유행의 파고 속에서 방역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했음에도 확진자는 매일 늘어나고, 안전한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됐다. 게다가 방역에 대한 피로감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코로나 감염이 어쩌면 운수소관(運數所關)이나 팔자소관(八字所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감염병이 운에 따라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방역 수칙 준수 등 감염 예방을 위한 노력 또한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모든 일이 미리 정해진 법칙에 따라 일어나므로 인간의 의지로는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경계 의식은 느슨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잠시 느슨해진 방역의식 다잡아야

1년 이상 계속된 방역 당국과 시민들의 노력에도 급속한 확산을 차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력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영국 등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더욱 강해 향후 방역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그동안 우리가 지켜본 것처럼, 바이러스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 대응은 운수 보기식 ‘복불복’(福不福) 게임이어서는 안 된다. 감염 여부는 전적으로 방역 수칙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달려 있다. 이미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로 감염을 막아 낸 수많은 사례들이 있지 않은가.

어찌 보면 새해 운세를 알고자 하는 욕구도 어쩔 수 없는 운명에 굴복하거나 요행을 기대하기보다 삼가야 할 일들을 미리 살펴 근신하고, 의지와 노력으로 이를 극복하려는 데서 비롯됐을 것이다. 한 해가 시작되는 설날을 신일(愼日)이라고 일컫는 것도 이런 맥락일 터.

그런 점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다져야 할 새해 각오는 철저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아닐까 싶다. 방역이 풀리면 원만한 새해 결심도, 상서로운 운세도 별무소용(別無所用)이기 때문이다. 백신과 치료제가 나왔지만 오는 9월까지 전 국민의 70%까지 접종을 완료해도 11월에야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고 한다. 그때까지 공동체를 지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은 방역 수칙 준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겠다.

대학 서열제의 완화와 초중등 교육 정상화

를 이대로 놔두고는 그 어떤 입시 정책도,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도 성공하기 어렵다. 어떤 형태로든 대학 서열 구조를 완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나는 대학 서열 구조의 완화책으로 다음 두 단계 과정을 제안한다. 첫 번째 단계는 수도권 소재 국립대학(서울시립대, 인천대, 서울과 학기술대학)과 지역 거점 국립대학 9개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이들을 공동 네트워크 속에 묶어서 공동 학위를 수여하는 것이다. 이 정책의 목표는 서울 소재 중상위권 대학(성균관대, 한양대, 이대, 서강대, 외대 등)과 대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 입시 정책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서울대 외에도 수도권 소재 10여 개 중위권 사립대학이다. 이들 대학 중 일부는 어떤 형태로든 국립대학 네트워크 속에 포함해야 대학 서열 구조 완화와 평준화라는 목표에 다가갈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필요한 것은 수도권 소재 중위권 사립대 중 5개 이상을 국립대학 공동 네트워크 속에 포함시키는 노력이다. 이를 위해 국립대학과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립대학에는 국공립대 수준의 재정적 지원을 한다. 지방 소재 사립대학 중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대학 몇 개를 이 프로그램에 추가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서울대의 참여 여부도 2단계 과정에서 결정하는 게 현실적이다. 서울대 폐지론이나 지방 이전론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지역 거점 국공립대학 9개와 수도권 소재 국공립대학 3개 및 사립대학 5개, 지역 소재 사립대학 5개 등

총 23개 내외를 공동 학위제 네트워크에 포함한다면 사실상 절반 이상의 대학 평준화가 이루어진다. 만약 이렇게만 된다면 이들 공동 네트워크 대학들이 대입정책에서 서울 소재 10여 개 사립대학을 대신하여 주도적 역할을 행할 수 있다. 당연히 대학 입시를 둘러싼 경쟁도 크게 완화될 것이다. 지방 출신 수험생의 ‘인(in) 서울’ 현상도 완화될 것이다. ‘인 서울’ 현상이 완화되면 국공립대학 공동 네트워크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지방대학들도 신입생 모집 등에서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지역 대학에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일이지만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는 초중등학교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또 입시 정책의 개선도 기존의 외적 환경을 그대로 놔둔 채로는 한계가 있다. ‘풍선효과’라는 말처럼 입시 정책을 수없이 바꾸었지만, 백약이 무효였던 과거사가 이를 잘 말해준다.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학의 상향식 평준화를 통한 대입 경쟁 완화와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교실 안에서는 혁신이, 교실 밖에서는 교육 혁명이 필요하다.

23개 내외의 대학을 상향식으로 평준화시키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약 2조~3조 원 정도가 될 것이다. 대입 진학을 위한 과도한 경쟁, 이로 인한 초중등학교 공교육의 파행, 학부모들의 높은 과외비, 그리고 국가적 재난에 가까운 저출산율 등을 고려한다면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하는데 머뭇거리 이유가 없다. 교실 밖의 교육 혁명을 위한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한다.

기고

‘귀농·귀촌’ 살아 보고 결정하세요

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주요한 이유들을 꼽는다면 첫째, 어디서 살 것인가? 둘째, 준비 자금은 얼마나 들까? 셋째, 살면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이유일 것이다.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어디에서 살 것인지 정하는 것부터가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한 자금 준비와 그 터전에서 지역사회 주민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어떤 일들을 할지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이 많아진다.

이런 고민을 이제는 국가가 함께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귀농·귀촌을 희망하지만 농촌 생활에 대한 정보·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실행에 부담을 갖는 도시 주민이 가장 6개월간 농촌에 직접 살아 보며 귀농이나 귀촌을 해도 좋을지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촌에서 살아 보기’ 프로그램이 나온다. 참가자로 선정되면 정부가 무료로 제공하는 숙소에서 묵으며 농사일, 농촌 생

활 등을 체험해 볼 수 있다. 한 달에 15일 이상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경우 월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농촌에서 살아 보기’ 프로그램은 막연한 환상을 갖고 귀농·귀촌했다가 정작에 실패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실제 거주하며 농촌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라는 것이다. 귀농귀촌종합센터를 통해 오는 2월 정보를 공개하고 3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난해 9월 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한 학술 자료 ‘역귀농·귀촌 의향과 결정에 미치는 요인 분석’에 따르면 귀농과 관련해 사전 교육을 많이 받거나 귀농 연차가 높아질수록 다시 도시로 돌아갈 확률은 낮아진다고 한다.

‘농촌에서 살아 보기’ 프로그램은 귀농·귀촌의 안정적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 인구를 증가시켜 농촌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될 것이다.

社說

자영업자 손실 보상 더 이상 늦춰선 안 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영업 제한이 장기화되면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비명 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영업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직접 지시해 귀추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그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와 당정이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한 손실보상제 법제화는 지난주 정세균 국무총리가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자 정 총리는 “이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질타하기까지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손실보상법의 2월 입시국회 처

리 방침을 공식화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이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이제 관심은 보상 규모와 방식에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집합 금지나 제한으로 줄어든 영업 시간만큼 최저임금 등을 지급하는 ‘정액제’나 업소가 신고한 지난해 매출에 연동해 보상액을 산정하는 ‘정률제’ 등 두 가지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전체 보상 규모는 현재 제출된 법안을 기초로 할 경우 14조~98조 원에 달한다.

결국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재정 부담 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해 결정하면 된다. 정부의 행정 조치로 영업이 제한돼 손실을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는 지금까지의 일회성·시혜성 지원이 아닌 실질적 보상이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뿐만 아니라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유행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손실보상 법제화를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글로벌모터스 이러니 사고 잦을 수밖에

최근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공장에서 일어난 잇단 안전사고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 다단계 하도급 고리가 만든 인재(人災)였던 것이다. 이 때문에 ‘노사 상생형 일자리’를 내걸었던 GGM이 산업협정의 고질적 문제점을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말발린 ‘노사 상생’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광주일보가 지난 1월25일 6면에 보도한 ‘작업 중 떨어져 숨진 노동자’ A씨는 다단계 하청 고리의 맨 아래에 위치하는 ‘을(乙) 중의 을’이었다. 영세한 하청업체의 경우 안전 설비·교육에 투자할 능력이 부족한 데다 공기 단축 압박까지 받게 되면 안전 관리·감독 또한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노동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다단계 하청 구조는 원형으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은 하청업체가 또 다른 업체에 공사 전체를 맡기는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공사 금액의 일부분만 챙기는 방식으로, 하도급의 꼬리가 길어지면 길어질

수록 공사 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최종 하도급 업체는 낮은 수주가에 맞춰 공사를 하면서도 이윤을 남겨야 하는 만큼 안전에 대한 투자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 23일 GGM 공장에서 추락해 숨진 노동자의 경우도 재하청 업체의 일용직 노동자였는데, 원청 중견 기업인 A업체는 B업체에 하청을 했고, C업체가 다시 재하청을 받아 작업에 들어갔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C업체는 A씨 같은 일당 노동자를 채용해 수주한 공사에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

원청 대기업의 하청과 재하청을 받은 업체들의 경우 낮은 수주가와 영세성 등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데도 빠듯하다 보니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 교육과 안전 설비에 신경을 쓸 틈이 없다. 따라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다단계 하청 시스템 속에 놓인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無等鼓

얼마 전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의 ‘비혼 출산’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사유리는 결혼하지 않고 정자만 기증받아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우리 사회에 ‘자발적 비혼모’라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 개념을 하두로 던졌다. 전통적인 가족 개념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지만 여론은 용기 있는 그녀의 고백에 힘을 실어 주었다.

전통적인 개념의 가족 형태는 ‘혼인한 부부와 미혼 자녀’다. 그렇지만 현실에는 모 가정, 비혼 출산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다. 1인 가구 비중

현행 민법에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 혈족, 형제자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50년 만에 호주제를 폐지해 2005년 가족에서 ‘호주’ 규정을 삭제했지만 다양한 화된 가족의 현실은 미처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가족 정책의 법적 토대인 ‘건강장기기본법’에서는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기본 단위’로 정의하면서 현실을 반영해 2018년 ‘사실혼’을 ‘가족’에 추가하려고 했지만 무산됐다.

여성가족부가 비혼 1인 가구나 동거 커플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4차 건강장기기본 계획안을 마련하고 어제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이다. 계획안에는 자녀의 성(姓)을 결정할 때 아버지의 성을 우선하는 기존 원칙을 폐기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고 한다.

이는 가족의 범위를 넓혀 선진국 수준의 법적 혜택을 주자는 것인데, 민성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가족(家族)의 의미가 식구(食口: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생계를 공유하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정필수 제2사회부장 bungy@



지선희  
농협 안성교육원 교수

TV에서 방송 중인 ‘나는 자연인이다’는 중년 남성들이 가장 사랑하는 ‘최애’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언젠가 꼭 시골에 가서 살고 싶다는 로망을 일깨워 주기 때문이다. TV 속 자연인의 삶은 삭막한 도시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농촌 생활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불러일으킨다.

이처럼 농촌에서 살아보고 싶은 로망을 가진 이들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에 옮기기 어려운 이유

|  |                   |                          |                   |
|--|-------------------|--------------------------|-------------------|
| 光州日報   |                   | The Kwangju Ilbo         |                   |
|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                   |                          |                   |
|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거 1(일간)                     |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                   |
|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편집국내선  | (대표 FAX 222-4918) | 경영지 원국 220-0515          | 문화사업국 220-0541    |
| 편집 부 220-0649  | 문화 부 220-0661     | (FAX 222-8005)           | (FAX 222-0195)    |
| 정치 부 220-0632  | 에 항 부 220-0692    | 기획관리국 227-9600           | 업무국 220-0551      |
| 경제 부 220-0663  | 사 진 부 220-0694    | (FAX 222-0195)           | (FAX 222-0195)    |
| 사회 부 220-0652  | 체 육 부 220-0621    | 디자인실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
| 전남 본부 220-0642   |                   |                          | (FAX 02-773-9335)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